

NCCK 에큐메니칼 세미나 누가 전환의 짐을 지고 있는가?

노동의 관점에서 본 정의로운 전환

2026년 8월 4일(화) 3-5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주최] 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 에큐메니칼신학과교육위원회
[공동주관] 영등포산업선교회,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목차

환영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렬 총무	2
주제강연	"지역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김현우 소장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4
논찬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의 당면과제" 이태성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21
논찬2.	"서로의 짐을 저 주십시오" 김정택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이사장)	30
논찬3.	"정의로운 전환과 교회의 책임" 이현아 목사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총무)	33

NCCK 에큐메니칼 세미나

누가 전환의 짐을 지고 있는가?

일시 2026년 8월 4일(화) 오후3시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

프로그램

좌장: 손은정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
- | | |
|-----------|--|
| 3:00-3:05 | 행사개요 소개 |
| 3:05-3:10 | 환영사 박승렬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 3:10-3:15 | 기도 박태권 목사 (충남NCC 회장, 태안풍천교회) |
| 3:15-4:00 | 주제발제 김현우 소장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
| 4:00-4:30 | 논찬 이태성 지부장 (발전비정규직연대)
김정택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이현아 목사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
| 4:30-4:55 | 질의응답 |
| 4:55-5:00 | 인사 이재호 위원장 (NCCK교회와사회위원회) |

환영사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NCCK 각 위원회 위원, 발제자와 토론자, 모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전환의 짐을 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큰 현실입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합니다. 그 전환의 부담은 지금 누구에게 가장 무겁게 지워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그 질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이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갈6:2) 교회는 시대의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비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먼저 그 짐을 살피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의 곁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와 노동, 지역사회와 생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세계를 함께 돌보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동안 노동, 인권, 생명,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정의와 사회정의가 함께 가는 길,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교회와 시민사회, 노동 현장과 더욱 깊이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단순히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와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발제를 맡아주신 김현우 소장님과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 지역의 아픔을 기도에 담아주신 박태권 목사님,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우리의 대화와 나눔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지역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김현우 소장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지역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2026.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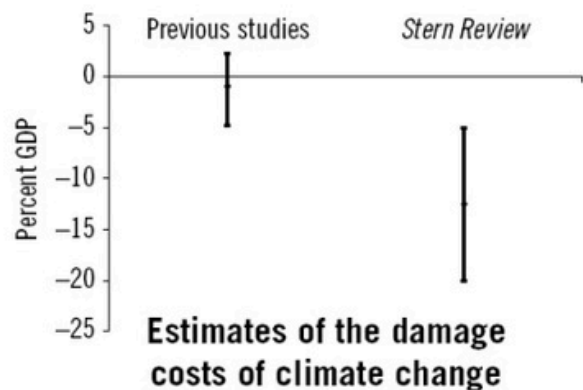
탈성장과대안 연구소

김현우

환경 보호와 경제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음. 환경보호 정책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거나 일자리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
- 2006년 니콜라스 스턴은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기후변화가 향후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래 유례 없던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에 따라 각국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기 시작

“환경(기후) vs 일자리”
고전적 대립구도에 변화가 시작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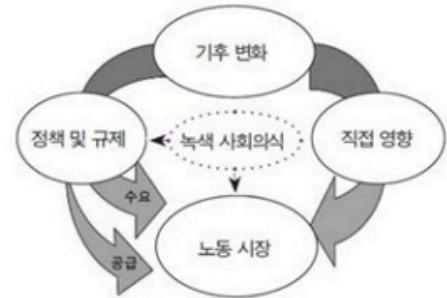
‘트릴레마(Trilemma)’ :

환경(Environmental), 에너지(Energy),
경제(Economy)의 세 가지 영역이 상호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면서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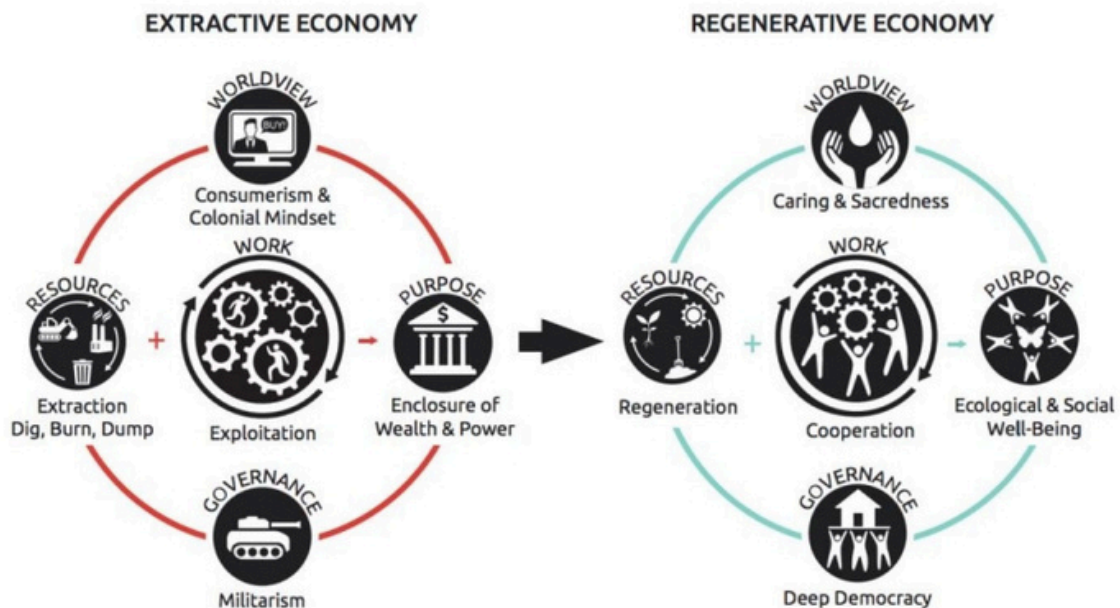
기후변화가 노동시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소비 과정을 ‘녹색화(greening)’해야 한다는 요청이 세계적으로 증대

- 기후변화 자체가 상품의 생산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변화시키는 경우(연료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나 농림 어업 환경의 변화)
-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관련 마케팅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행동’이 변화하는 경우(녹색 및 친환경 상품이나 에너지 절약형 차량 생산과 소비가 유도되는 현상)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되어 도입되는 규제들의 영향 (탄소국경조정, ESG, RE100 등 간접적 규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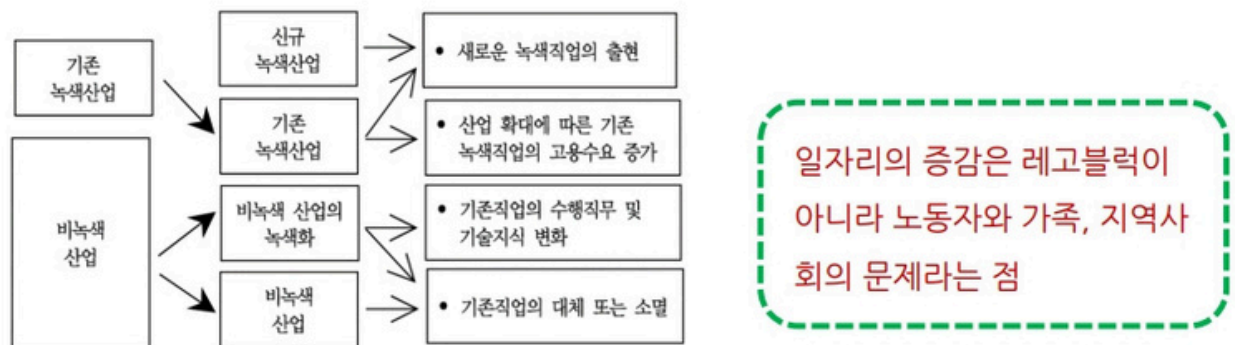


채굴 경제에서 재생 경제로



생겨나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 에너지전환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반면에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예컨대 석탄, 가스, 석유, 핵, 자동차 산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됨
- 미국기업연구소는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전통적인 전력플랜트는 폐쇄되고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는 해체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100만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석탄, 가스, 핵, 자동차 산업에서 자본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 이런 산업으로부터 빠져나온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에너지' 비전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 국제노총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후변화도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고용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노동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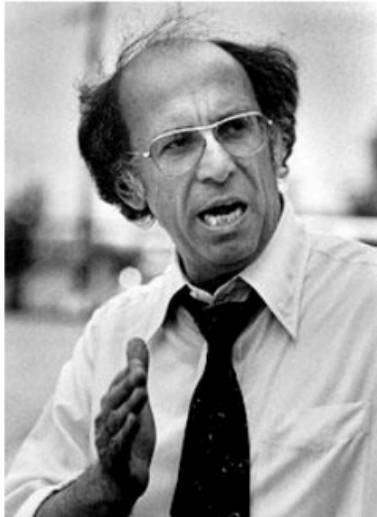


산업 부문마다 차별적 영향

분야	완화수단	고용 영향	비고
에너지	-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전환 - 재생가능한 열과 전력 생산 확대 - 산업과 상업시설의 에너지 진단 확대	-,+ + +	- 석탄산업의 고용감소와 가스산업의 고용증가 -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용 증가와 화석연료/전력산업의 고용감소.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여전히 불확실함
건물	- 에너지효율적인 조명 촉진 - 에너지효율적인 시설 사용 촉진 - 단열 개선	+ + +	- 건물혁신은 노동집약적인 직접고용. 일자리 질은 낮기 때문에 교육과 자격이 중요함
운송	- 도로교통에서 철도, 개인차량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 - 바이오연료 개발 확대 - 개인 교통수단 축소	-,+ + -,+	- 도로교통의 노동자들의 철도나 대중교통으로 전환 - 바이오연료는 노동집약적이나 노동조건과 환경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2세대 연료의 노동친화적 개발은 빈곤지역의 일자리 창출효과 - 청정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옴
산업	- 에너지효율성 수단 실행 - 원료 재활용과 대체 - 비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 통제 - 특수공정 기술 개발	-,+	- 아웃소싱을 경험하고 있는 산업은 기후보호정책에 영향 받음. 그러나 연구·개발과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은 부정적 영향을 피함

정의로운 전환 아이디어의 시작

선진 노동자 토니 마조끼 (Tony Mazzoc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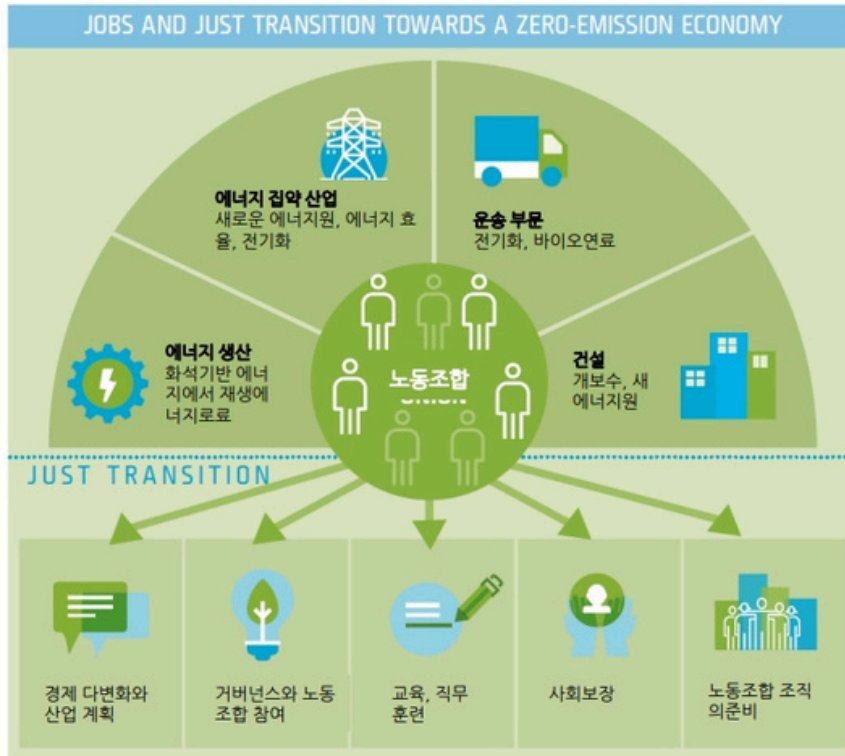
-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 속에서 노동현장과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보다 노동친화적인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의 아이디어 제공
- 2차대전 직후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과 1970년대 평화군축 운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참여 경험
-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에서는 화학, 정유, 원자력 노동자들이 일할 여지가 없다고 염려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1980년대 후반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 (Superfund for Worker's)'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직무훈련 제안

정의로운 전환의 확산과 발전

-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 노동운동은 기후변화에 대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능동적 대안을 모색
- 2015년 파리협정 전문은 “각국의 발전 우선순위에 조응하여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칙을 고려할 것”을 포함
-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갖는 취약성의 여러 측면들, 즉 일자리 영향에 관련된 불확실성, 일자리 상실의 위험성, 비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위험성, 광역 경제와 지역 경제의 황폐화 위험성을 다루는 정책 제안의 패키지
- 최근에는 환경정의 및 기후정의 운동과 관련해 인종, 성, 계층,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전략으로 확장



저탄소 전환에서의 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



노동조합의 시각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핵심적인 측면

- 경제적 다변화와 산업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 거버넌스와 노동자 참여: 사회적 대화의 국가적 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관련 정책 계획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교육, 훈련 및 숙련: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환과 관련된 기술적 수요를 어떻게 평가하고 예비할 것인가?
- 사회 보장: 급속한 탈탄소화가 사회 보장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 노동조합 조직의 준비: 전환에 참여하도록 조합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준비시킬 것인가?

정의로운 전환의 6대 원칙

- 1. 전 세계의 노동자, 지역 주민, 원주민들은 직장, 가정 및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 물, 땅 그리고 음식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창출하고 건강한 경제를 갖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 3. 환경, 건강 및 노동법의 자유화와 기업의 세계화에는 국경이 없다. 따라서 해결책은 지역, 권역, 국가 및 지구적 연대를 요구한다.
- 4. 공정한 경제, 무역, 건강 및 안전 및 환경 정책의 개발에는 오염, 생태적 피해 및 경제 구조 조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최전선 노동자와 울타리 지역공동체(fenceline communities)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5. 지속 가능한 발전, 건강한 경제 및 깨끗한 환경을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 또는 미래의 환경 및 경제적 불의와 불공정한 자유 무역 정책의 희생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 6. 노동자와 지역공동체 주민은 경제적 그리고/또는 환경적 불의를 저지르는 모든 집단과 조직에 이익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조직에는 정부, 군대, 기업, 국제 기구 그리고 기업의 책임성 보장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미국 정의로운 전환 연합, 1997)

정의로운 전환의 4대 기둥

전환의 기둥들	핵심 요소	
	단기적	장기적
1. 상당한 정부 지원	발전소 및 탄광 폐쇄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들	지역 경제를 재구조화하고 이전 화석연료 사이트를 변형하는 정책들
2. 특화된 자금 흐름	임금 대체 또는 공장 폐쇄로 인한 세수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등 단기적 필요를 해결하기	신사업 창업 지원 및 장기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장기적 필요에 대한 투자
3. 경제적 다변화	화석연료 인프라 없는 지역 경제 구상들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는데 특별한 초점을 두는 공동체 비전의 실행
4. 강력하고 다양한 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특히 노동자와 공동체들)이 시설이 폐쇄되기 전에 모여,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다루고 모든 필요를 보호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	전환 정책에 대한 지원을 조직하고 구축하고, 실행 측면에 참여하고 감독하며, 의사 결정권자와 선출직 공무원이 책임성을 갖도록 만들기

J. Mijin, Cha, Just Transition for All (2024)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질문들

- 한 노조 활동가는 정의로운 전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사라지는 산업과 일자리에 그냥 ‘멋진 장례식’ 정도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
- 미국의 주류적 환경단체 시에라클럽 대표 아론 메어는 정의로운 전환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보험 정책으로 묘사
- 무브먼트 제너레이션(Movement Generation) 조직의 활동가는, 전환이라는 말이 부드럽고, 대부분 쉬운 과정으로 들리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결국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단절,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

- 미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동자 네트워크(LNS)” 2015년 인터뷰 조사

정의로운 전환이 나아갈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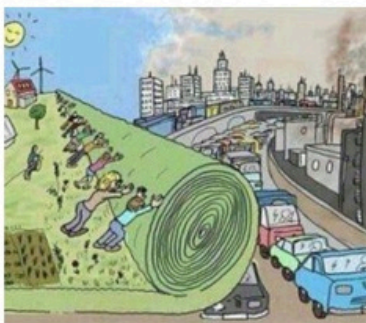
- **Go Big**
기후-안전 경제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전환의 범위와 규모는 우리에게 과감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역, 인구 및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자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Go Wide**
전환은 또한 전반적이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기타 노동자 조직, 최전선 커뮤니티 조직, 원주민 공동체들이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
- **Go Far**
전환은 미래를 내다 보아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전환을 위해서는 세대 차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JUST TRANSITION
LISTENING PROJECT**

-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더는 방어하지 말라
- 일관성을 가져라
-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라
- 적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동맹하라
- 담대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라 (TUED의 손 스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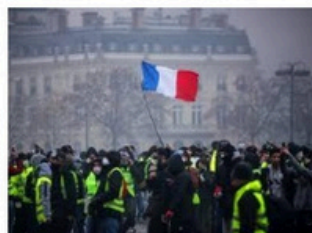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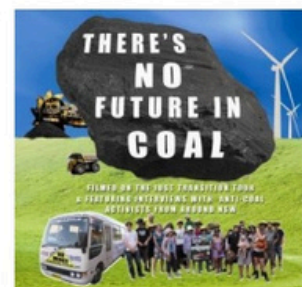
정의로운 전환의 이상과 현실



The "Just Transition" Paradox: Can a Delayed Climate Response be Truly "Just"?



William Mitchell
Senior Manager | Nature Lead | Strategic Risk Advisory



잭 먼데이와 '그린 밴'



- 1970년대 초, 잭 먼데이 등 호주 노동자들이 펼친 '녹색 금지(Green Ban)' 캠페인. 환경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자연환경 및 역사적 유적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봉쇄. 이런 전통은 1980년대 철도, 부두하역 노동자 등의 우라늄 운송저지 투쟁으로 이어짐.

노동조합이 자본의 요구에 반하여 지역사회와 환경을 살리는 '적극적 거부' 운동에 나서다

루카스 플랜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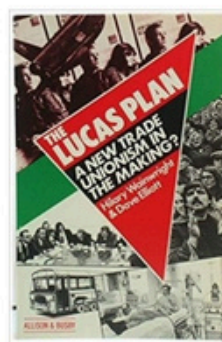
Engineers

Mike Coo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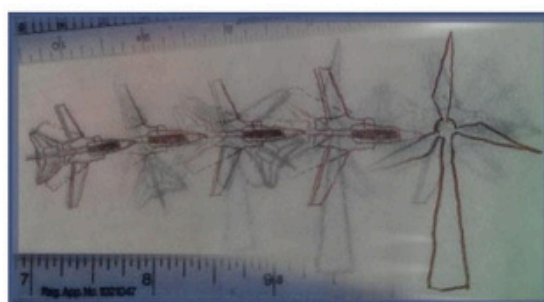
"Science and technology is not given. It was made by people like us. If it's not doing for us what we want, we have a right and a responsibility to change it. We need a clear view of what we wa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ourage to stand up and do something about it."

"Ingenieurs skal ikke være industriens Elendighed og sig: 'Høj gjorde kun hvad jeg fik bedt på'."

Architect or bee? : the human/technology relationship. Langley Technical Services, 1980.



- 1970년대 초, 영국 루카스 항공사에서 벌어진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운동을 주도한 마이크 쿨리
- 군용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던 공장의 구조 조정에 맞서 노동자 조직, 좌파 활동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적 협동 계획을 작성함



전투기 대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기후위기 시대에 루카스 플랜은 다시 현재성을 갖는다

디아블로 캐년의 정의로운 전환 합의



- 1985년에 가동을 시작한 미국 디아블로캐년은 연간 1,8000G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캘리포니아 전력 수요의 8.6%를 담당한다. 환경 단체들은 건설 시기부터 단층 활동 등을 이유로 안전성을 염려하며 반대 운동을 벌였고 법률 소송도 일어나곤 했다.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PG&E는 1,2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도 200명의 노동자가 있다
- 2016년에 사측에서는 연장 운전시의 경제성 하락과 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상하며, 면허 갱신에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고 이를 인지한 노동조합은 대화에 나섰다. 그 결과 디아블로캐년의 가동을 8-9년 연장한 뒤 폐쇄하고, 조합원들은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보너스 등 보상을 받으며 지역사회도 줄어드는 세수만큼을 사측이 보전해주는 합의에 도달했다. 동시에 사측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설비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은 직업 훈련을 통한 전환을 준비하며, 지역사회는 경제와 세수를 다변화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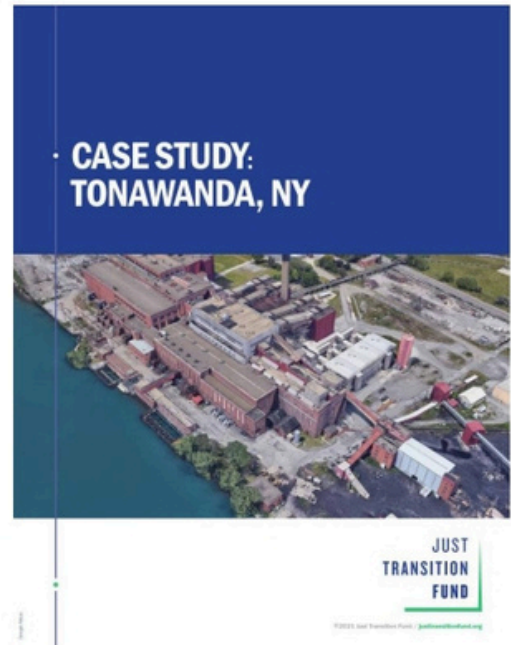
콜로라도의 정의로운 전환 플랜

- 콜로라도는 2018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법이 발의됨. 이 법안은 실제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들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막는 대신에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의식적 접근을 채택하는 동인이 됨.
- 콜로라도는 노조와 다른 지역 및 환경운동과의 협력 경험이 있었고, 노동 지도자들은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일자리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짐.
- 2018년에 노동조합은 자체적인 검토를 계속했고, 로버트 폴린에게 콜로라도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사회운동간 대화에 참여.
- 노조와 협력자들은 2019년 주의회에서 도입될 탈탄소화 법안에 수반하여 정의로운 전환 법안을 마련, 두 법안 모두 2019년에 통과됨.
- 정의로운 전환 법안은 2020년 초에 운영을 시작한 정의로운 전환 사무국(OJT)과 노동조합, 기업, 경제 개발 전문가, 영향을 받는 카운티 및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대표, 정치 지도자,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의로운 전환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자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계획 초안을 작성하도록 함.
- 행동 계획은 2020년 12월 31일에 공개되었으며 제안 사항의 실행은 지금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시행 예정. 지역공동체와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자금 조달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이며 다른 여러 솔루션들과 더불어 탐색과 해결이 필요함을 확인.



헌틀리 동맹과 대안 프로그램

- 헌틀리 동맹(Huntley Alliance)은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고 버팔로 시의 백인 노동계급 교외인 토나완다(Tonawanda) 마을이 석탄발전소라는 주요 수입원을 잃었을 때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립
- 지역공동체 기반 환경단체인 CAC(서부 뉴욕 청정공기 연합)는 마을의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오는 수입 하락으로 인해 이미 실직을 경험한 서부 뉴욕 노동자 연맹(WNYALF) 및 지역 교원노조와 대화를 시작
- CAC, 교사, 여러 블루칼라 노동조합, 일반 노동자, 시 공무원, WNYALF가 만나서 2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조직화 함
- 주 범위 기금을 조성하는 입법 요구를 가지고 주민을 만나고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주 대표와 협상 시작. 공직자들도 호응했고,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의 참여 속에 지역 재구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짐
- 석탄 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아무도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전환할 수 있었고, 이 모델은 다른 도시들로 확산 되었음



조선업과 풍력 산업의 호환성

- 해외의 사례들은 불황을 맞이한 조선업 기술과 도크, 인력을 해상풍력 제조와 설치로 연결시킬 가능성을 보여줌



100년 전 타이타닉호를 건조하던 벨파스트 조선소에서 해상 풍력 터빈을 조립하고 있다

유형	주요 사례	특징
신규 진출	인도의 Suzlon, 중국 Goldwind 등	신규 기업의 풍력시장 진입
산업 전환	덴마크의 베스타스	70년대 석유파동과 덴마크 조선업의 하락세로 선도적인 전환 결정 (초기 성공모델로 각광) 오덴세 조선 등 현재도 풍력산업으로 전환 시도 중
	미국의 US Steel	미국 US Steel의 경영악화 상태에서 스페인 가메사가 인수함
	독일 뤼센크루프의 조선업	풍력제조사인 지악-샤프가 조선업 인수(고용 승계 보장) 등
산업 확대	미국의 GE, 독일의 Enercon, Siemens, 일본의 Mitsubishi 등 다수 대기업	산업영역 확장 주로 금속, 에너지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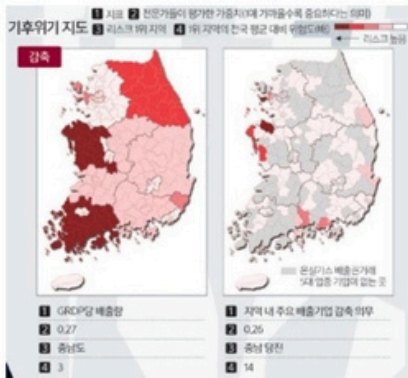
태백과 정선, 아쉬운 전환 사례

- 한국에서는 일제시대에 개발된 강원도 남부와 경상북도의 탄광(무연탄) 지역에서 산업전환 사례를 찾을 수 있음
- 석유와 천연가스로 연료 수요가 바뀌면서 무연탄 수요가 줄어들었고 정부는 90년대 초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
- 탄광 폐업으로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를 선택한 노동운동과 지역사회(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 그러나 그러나 고용불안과 지역 피해는 계속됨
-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없었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역량이 부족했던 당시. 그러나 기후위기 가속화와 산업 전환으로 이러한 경우는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음



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초점들

- 정부의 기후정책이 구체적인 지역과 산업에 끼칠 위험은 훨씬 클 수 있지만 충분히 조사되어 있지 않음
-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제철과 조선업 및 석유화학 산업이 다수 소재한 전남과 거제, 울산 등은 '기후 리스크'가 매우 큰 지역임. 또한 내연기관자동차 생산과 원전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큰 기업과 지역의 경우 빠른 전환을 위한 대비가 필요함. 하지만 이런 지역과 업종에서 노동자와 지역의 준비는 거의 없는 상황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추진전략,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실제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 방향

-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 예방과 보상 수준을 넘어, 더 나은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위한 청사진이 되어야 함
- 또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는 준비 단계, 폐쇄 단계, 회복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되, 각 단계의 핵심적인 과제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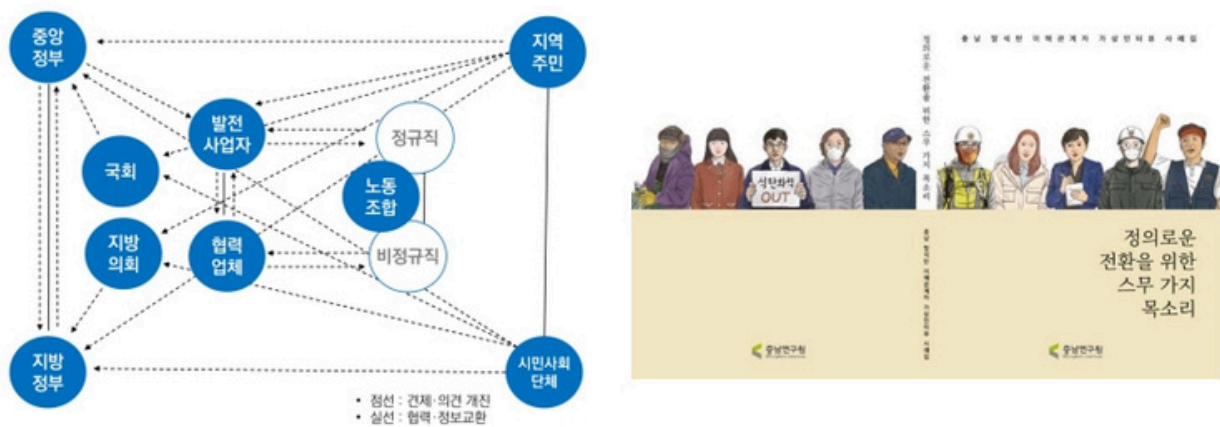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2021)

정의로운 전환 전략 사례 (충남 탈석탄)

전략		주요 내용
전략 1	산업 다양화	○ 새로운 산업(에너지, 환경, 해양 등) 육성 ○ 지역경제의 산업전환 역량 구축
전략 2	노동자 지원	○ 기존 산업부문 노동자를 위한 지원 ○ 새로운 산업부문 노동자를 위한 육성
전략 3	지역사회 지원	○ 주변지역 및 영향지역의 쇠퇴에 대한 대책 ○ 지역사회의 지역전환 역량 구축
전략 4	복원 및 재생	○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대책 강화 ○ 폐부지 및 폐시설에 대한 깨끗하고 안전한 복원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재생
전략 5	추진기반 조성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및 계획 직접 참여(위원회 등) ○ 장기적인 전환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법, 예산)과 전담조직 필요

정의로운 전환의 이해당사자

- 정의로운 전환은 지역과 부문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각 이해당사자 내에서도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확인하고 쟁점을 풀어주는 과정이 정의로운 녹색 전환 과정이기도 함
- 이들의 관계는 견제(대립)·의견 개진·협력·정보교환, 운동의 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탈석탄 전환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구분	탈석탄 전환	예상 영향	대안/요구	사회적 대화
발전사	순응	◦ 사업·매출 축소 ◦ 경제 쇠퇴하나 당면문제 아님	◦ LNG 건설 ◦ 재생에너지 사업	주로 지자체, 일부 지역단체
직원	정규직	◦ 고용 변화 문제 ◦ 지역 경제 쇠퇴	◦ 업무 전환 배치 ◦ 명예 퇴직 ◦ 신규 채용 중단 ◦ 성능 개선 폐쇄유예	산업부, 기재부 상대 진행중
	협력사	◦ 큰 틀에서 동의하나, 일자리 상실 우려	◦ 공공사업화, 정규직화, 전환배치 ◦ 성능 개선 폐쇄유예	강력히 필요 주장
	자회사	◦ 고용 유지 가능성에 따라 동의 수준에 따라	고용보장	-
	하역	◦ 일자리 감소 우려	◦ 상용화(하역업체 직접고용) ◦ 연락시간 전환배치	정부와 협의중
	플랜트	◦ 일자리 감소 우려 ◦ LNG 건설로 일자리 창출	◦ 지역 이동 ◦ 지역 내 플랜트 일자리 유지	-
지역주민	◦ ◦	◦ 대기질 향상 ◦ 환경 복원 ◦ 마을 소득 감소 ◦ 일자리 상실	◦ 생태복원(어장) ◦ 성능 개선 폐쇄유예 ◦ LNG 건설	◦ 필요에 동의 ◦ 참여의향 있음
시민단체	환영	◦ 인구, 일자리 감소 ◦ 심각하지 않을 것	◦ LNG, 재생에너지 발전 ◦ 신규기업 유치	◦ 필요 동의 ◦ 참여의향 있음 ◦ 지역 언론 주관 가능
지자체	◦ 순응 ◦ 중앙정부, 충남도 지원요구	◦ 일자리 감소 ◦ 인구감소 ◦ 경제 쇠퇴 우려	◦ 경제 발전(LNG, 수소경제, 기업유치) ◦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풍력) ◦ 발전소와 협력	◦ 발전사와 발전사업 협력 ◦ 정부, 충남 대책 협의 ◦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 소통 부족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지역의 모색



지역 대안의 시나리오 만들기

- 시나리오 1. 전통적 에너지 산업 및 제조업 의존 지속: (거시적 경제, 정치, 환경의) 랜드시케이프의 변화 고려 부족, 화석연료 체제와 석유화학 산업의 한계를 간과함
- 시나리오 2. 미래항공, AI 등 첨단 미래산업 유치 기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부족, 중앙정부 등 외부 지원 의존, 시장의 우호적 변화가 불확실하다는 점
- 시나리오 3. 에너지전환 중심 산업 다변화와 지역 공동의 부 구축, 복원과 재생의 2050년 기획: 가장 미래지향적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 역량 부족, 단기적 성과 보이기 어렵고 동의 확보 곤란하다는 점

향후 과제

- 제도적 과제
 - 탈석탄 지원 특별법 입법
 - 지역 관리기업, 공동의 부 관련 법률 제정
 - 지역 앵커 기관, 정의로운 전환 기구 (JT 지원 센터) 설립
 -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규모와 용처(지역전환 실질적 기획과 임파워먼트) 개선
- 운동 기획
 - 서산 태안 지역 그린뉴딜 기획과 캠페인
 - 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지역 연구소 및 재단 설립 운동
 - 복원과 재생의 25년 공동 기획(연례 행사화)
 - 발전소 폐쇄 부지의 공공자산화와 공공적 이용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 지역 철도망 확충 대중 운동

서산 태안 지역의 배경, 스토리, 중요한
사건과 계획, 자연 및 경제 자원, 전환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주민들의 바람,
노동조합의 구상...



서산 태안의 정의로운 전환의 바탕이
될 키워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의 당면과제

이태성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석탄화력발전 폐쇄 정의로운 전환 당면과제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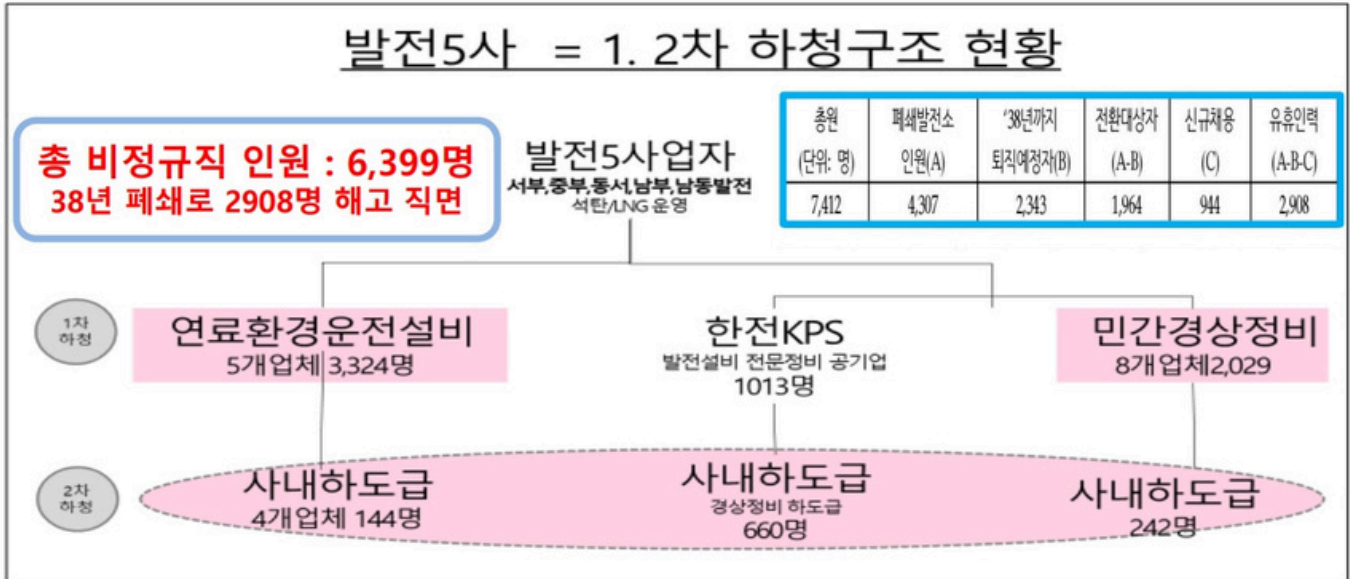
발전비정규직연대 이태성지부장

1

CONTENTS

석탄발전 폐쇄 경과

김용균-김충현으로 이어진 위험의 외주화



에너지시장의 급격한 변화

전력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환경 변화

▶ AI 시대 에너지 확보 전력 필수

- 국가경쟁력은 안정적이고 빠른 전력 공급 능력으로 재정의
 -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
 - 과거 경쟁 = 반도체 및 기술 → 현재 경쟁 = 전력을 먼저 확보하는 국가기업

▶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공식화

-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국정과제로 제시한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유지하며, **후속 이행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 예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추진 등

▶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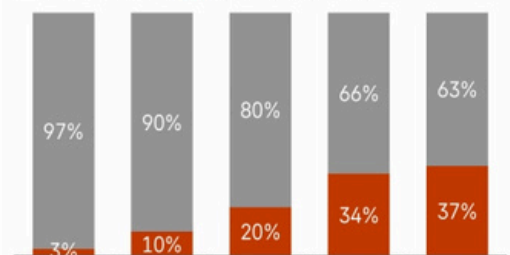
- 주력전원화 단계 진입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공식화
 - 재생에너지 수용 가능한 전력망 동시 추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계통 확충을 위해 국비 투입 확정

에너지 전환 추진 여력 제약

개별 회사/발전소 단위 의사결정으로
장기적·대규모 전환 투자 유인이 부족하며, 에너지 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경향 有

발전 5개사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4년 기준)

■ REC 구매 비율 ■ 자체 발전(조달) 비중



→ RPS 본래 취지는 자체 전원 확보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이나, REC 구매 중심의 의무 이행이 병행되고 있음

발전5사 공기업 체계의 한계에 따른 통합모델 필요

대규모 석탄발전 폐지로 인력 전환이 불가피하나, 분절된 구조로 통합적 인력 재배치와 신속한 전환 대응이 어려운 상황

또한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퇴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분절된 체제로 감당 가능할 것인가?

▶ 연도별 노후발전소 폐지 계획 (단위: 개수)

구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합계
'26		1		1	1	3
'27	2	2			1	5
'28	1	1		1		3
'29	1		4	1		6
'30			2			2
'31		2				2
'32				2		2
'34	2					2
'36			2			2
'37			2	2		4
'38	1				4	5
합계	7	6	10	7	6	36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이나...

발전 5개사로 분절된 구조는 좌초 자산·인력 전환을 유연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 노출

현 분절 구조 현실은...

- 발전 5사 법인 분절로 회사 간 인력 재배치 및 인사교류가 어려운 구조
- 분리·비대화된 운영 체계는 의사결정이 다중화되어 민첩한 대응이 어려움
- 인력 수급 미스매치와 갈등 비용 위험이 커짐

하지만 오랫동안 피해지역과 노동자에게 정의로운 전환은 있는지?

발전사와 태안화력이 떠나면 실제로 잃는 것

1 법인세·지방소득세 기반의 악화

- 법인세는 국세이므로 국가 전체 세수 총액에는 변화가 없음
-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안분되므로, 본사가 떠나면 해당 지역에 귀속되던 지방소득세가 떨어짐

상당히계법인 추정 지방세 감소 효과
최대 약 25억 원

※ 지방세 11개 세목 중 본사 이전이 직접 영향을 주는 5개 세목만 계산한 수치이며, 고용·소비·협력업체 이전 등 간접 효과는 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2 본사 직원의 소비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상권 공동화

- 점심 식사, 회식, 부동산 임대, 자녀 교육 등 본사 직원의 소비가 통째로 다른 도시로 이동
- 본사 주변에서 수십 년간 생계를 이어온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매출이 사라지는 직접적인 타격

지방세 25억 원으로는 전혀 잡히지 않는 **실질적 손실**

3 협력업체·관련 사업체의 동반 이전 압박

- 본사 인근 업체들은 영업 접근성 유지를 위해 이전 여부를 고민
- 이전을 안 하면 거래·영업에 불리, 이전을 하면 기존 도시의 일자리와 사업체가 감소

어느 쪽을 선택해도 기존 본사 소재지에는 **손실**로 남습니다

태안지역 피해현황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감소
5,510명

2040년
56,386명

약 **131,464억 원**

25.06.18 기후부 발전5사 통합 역할기대 및 전환 개편안 발표: 투명인사 취급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CONTENTS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정의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해외사례 하이브리드 접근 선호)

해외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사례 조사



해외 사례	사례 특징	실행 공간	실행 기간
1 미국 콜로라도주	지역 차원의 탈석탄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지방	상설
2 미국 뉴욕주	통합적 거버넌스 내 정의로운 전환 통합	지방	상설
3 미국 애틀랜타 지역	민간 기구의 기술 조성 및 플랫폼 역할	지방	상설
4 캐나다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TF	국가	임시(가동)
5 독일 루르 지역	지역경제 재구조화	지방	상설
6 독일	탈석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국가	임시(협의)
7 유럽연합	정의로운 전환 액션플랜(기금, 플랫폼, 계획)	다중	상설
8 체코	탄광 거버넌스에서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로 전환	국가	상설
9 슬로바키아	정부 주도에서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 대화로 전환	국가	임시(협의)
10 그리스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	국가	상설
11 독일	독일 자동차산업 지역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대화	지방	상설
12 영국 스코틀랜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역할(지역 기관)	지방	상설
13 아일랜드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의 수직적 연계	국가	상설
14 스페인	사회적 대화와 정의로운 전환 협력	국가	상설
15 뉴질랜드	정의로운 전환 기관과 정의로운 전환의 수직적 연계	국가	상설
16 기타 사례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터키, 그리스, 슬로바키아, 가나,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소장(7/18) 정의로운 전환: 심화와 확장 목표로 인용

	사례와 특징	특이 사례
하향식 접근	- 그리스: 하향식 거버넌스 모델 - 영국 스코틀랜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역할(독립 자문기구)	
상향식 접근	캐나다: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TF	
하이브리드 접근	- 미국 콜로라도주: 지역 차원의 탈석탄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미국 뉴욕주: 통합적 거버넌스 내 정의로운 전환 활성화 - 독일 루르 지역: 지역경제 재구조화 - 독일-탈석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 유럽연합: 정의로운 전환 액션플랜(기금, 플랫폼, 계획) - 아일랜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의 수직적 연계 - 스페인: 사회적 대화와 정의로운 전환 협력 - 뉴질랜드: 정의로운 전환 기관과 정의로운 전환의 수직적 연계	- 미국 애틀랜타 지역: 민간 기구의 기금 조성 및 플랫폼 역할 - 체코: 하향식 거버넌스에서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로 전환 - 슬로바키아: 정부 주도에서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 대화로 전환

실질적 대책에 취약한 한국의 거버넌스 최근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의 복합 맥락과 구조적 함정 인식 중요

국내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현황

- ❖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대통령 소속 심의·의결기구, 탄소중립기본법 근거)
 -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분과, 에너지 산업전환 분과,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
- ❖ 고용정책심의회와 산업전환고용안전전문위원회(고용정책기본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근거)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예정
- ❖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2024년 12월~)
 - 정부, 지자체, 발전사 참여, 현안 논의 및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예정
- ❖ 고 김중현 사장과 재발발자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국무총리 훈령, 2025년 8월~종료)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및 후속 (가)발전산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운영 합의(2026년 2월)
 -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발전산업 노동자에 대해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협의체가 다뤄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함
 - ① 연료전환운전 하청 노동자와 경상정비 민간협력사 하청노동자, 발전공기업(발전5사)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안
 - ② 1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재배치, 근무패턴, 직무전환 교육 등 인력운영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
 - ③ 고용안정 방안의 실제 범위를 결정하는 관련 에너지 정책(석탄, LNG복합 등 화력발전소의 폐쇄 절차,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공공부분의 비중 확대 및 인력 육성,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경비산업의 공적 역할 육성 등)
 - Cf.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국무총리 훈령)
- ❖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및 공문화(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2025년 12월)
 - ❖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방안(2026년 5월, 상임위 통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의 건 수립
 - 사도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대한 '지역전환 협의체' 심의 과정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소장(7/18) 정의로운 전환: 심화와 확장 목표로 인용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례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이 지방정부에 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이 특징적 임(이안소영 외, 2025)

	거버넌스	주요 내용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 심의기구 • 공동위원장(단체장, 위촉위원 포함) 포함 30명 이내 구성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 심의기구 • 공동위원장(단체장, 위촉위원 포함) 포함 30명 이내 구성 • 안전발생시 위원회 구성 후 안전 심의 종료후 자동 해산
경주시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위원회	• 심의 자문기구 • 위원장(위원장 호선) 포함 15명 이내 구성, 상설 고려
부산시	노동전환지원위원회	• 심의 자문기구 •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지원위원회	• 심의 자문기구 •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
전라북도	노동전환지원위원회	• 심의 의결기구 •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하지만 높은 민간/해외 의존도

경제 > 산업·재계

동·서·남해 해상풍력 뒤편 큰 손, 맥쿼리가 한국 바다 노리는 까닭

[주간조선]

한국의 바다와 바람을 장악한 해외자본

맥쿼리 해상풍력 관련 소속회사

자료=맥쿼리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코리아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귀신 고래 해상풍력 발전 1·2호(울산)
지원드스카이(청사포)
부산 해상풍력 발전(다대포)
기장 해상풍력 발전
해운대 해상풍력 발전
거문도 해상풍력 발전
맹골도 해상풍력 발전
부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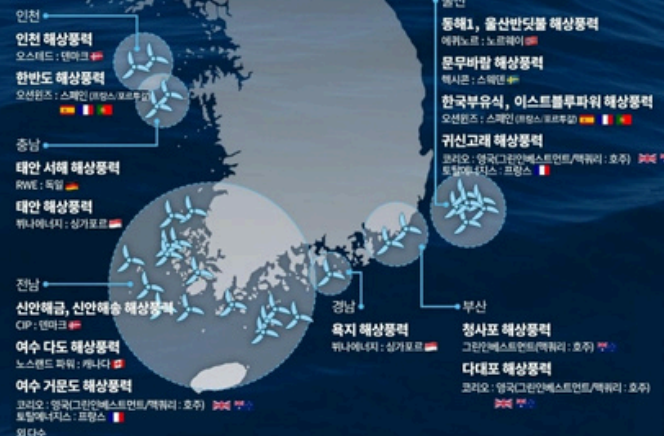
해상풍력 1GW 당 민영화 비용 추산

구분	자기자본 이익률(ROE)	조달금리	20년운영
차이(민간 - 공공)	10%p	2%p	-
자기자본(15%)	9,000억원	900억원/년(A)	-
금융조달(85%)	5조 1,000억원	-	1,020억원/년(B)
표준투자비	6조원	민영화비용(A+B) =	1,920억원/년 3조 8,400억원

한국 바다와 바람을 장악한

해외자본 참여 해상풍력사업

*2025년 3월 발전사업자기준



정의로운 전환의 해법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이다!

500MW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 필요 인력 수요 비교

구분	석탄발전	LNG복합	비고
발전공기업	96명	60명	석탄대비 63%
협력사	경상정비 인력	53명	35명
	연료환경 인력	40명	-
	협력사 전체인력	93명	35명
전체	189명	95명	석탄대비 50%

하지만

발전5사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계획에 따른
운영관리 필요인력 추산

구분/ 총인원	운전사(발전사) (운영 및 BOP 유지보수 감독)	제작사 (터빈 유지보수 감독)	협력사 (터빈 및 BOP 유지보수)	전문업체 (CTV 운영관리)
3,861	795	1,023	1,703	340

석탄발전소 징검다리로 LNG발전소
지어도 발전노동자 다 못 간다

34년까지 계획된 공공 해상풍력
발전만으로 3,861개 일자리 만
들 수 있습니다!

폐쇄와 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기능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될
경우 현재 발전공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세수 감소와
경제적 위축과 노동자 고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As-is 현행 발전사 조직구조



토하 박저사



재생에너지 전환 통한 재교육 전문인력 육성 필요

○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인력양성 협업 관계부처

태양광·풍력 인력양성 방안(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6.5월)

- (태양광) 태양광발전설비기사 **전** 자격체계(기능사~기술사) 구축, 업무범위 확대(설계·감리·안전관리 등), 탠덤셀·Si 제조공정수상 태양광 등 차세대 기술 고급인력 확보 추진
- (해상풍력) 해상풍력 인력양성 협력방안 마련('26), 대학(원) 융복합 교육과정·특성화고 해상풍력 학과 신설, 국내외 터빈사·개발사와 **훈련 프로그램·센터** 공동 개설
- (육상풍력) 글로벌 안전·기술 교육 이수 훈련비 지원, 산업계 협업체 운영 등

○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펀드 조성, 고가 실습 기자재를 갖춘 실전형 교육장을 구축하여 신산업 인력난 해소 **기후부**

현장사례 솔라라이트, O&M 인력난에 자체 교육 인프라로 대응

- ▶ 공공 교육 인프라 부재 속 자체 구축한 ESS 테스트베드에서 배터리 조립·고의 오류 해결 실천 교육 실시, 사내 기술 인증제 등 도입



태안-보령 중심의 발전노동자와 지역 협동조합 설립



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몇가지 자랑할 만한 타이틀

- 국내 최초,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
- 국내 최초,
'자연배당'과 '정의로운전환'을 정관에 담은 협동조합
- 국내 최초,
노동자 참여방식의 햇빛발전 운동



15

서로의 짐을 져 주십시오

김정택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이사장

NCK 교회와 사회위원회 에큐메니칼 세미나 발제 논란(2)

김정택 목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이사장)

(1)이번 세미나에 임하면서 기후재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류 전체가 함께 견뎌가야 할 고난이기에 삶의 근본적인 방식, 신앙.신학적 성찰을 우선 깊게 해야 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생태사상가이면서 신학자인 브루노 라투르는 기후위기와 인류세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여 무한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지구는 더 이상 수동적인 배경,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반응하고 되받아치는 강력한 주체로 활동하는지질시대는 인류의 삶의 방식과 정치를 뿌리부터 흔들며 대고있는 문명의 전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지구의 비인간 자연공론자들과 함께 지구에 터전을 마련하려는 자와 지구에서 탈출하려는 자(화성 이주를 꿈꾸거나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만하는 자)의 대립으로 재편될 것이라 바라보며 종교와 정치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발제자가 진단한대로 고난의 기간을 줄이거나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에너지산업에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기존산업의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피해는 단기적일 수 없고 장기적일 것이며 처처에 발생할 것입니다.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해당 산업의 기업등도 노력하고 하게 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 노동자,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연대일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지혜로운 활동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간 연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구성도 일시적이 아니라 상설적인 활동체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는 민.관협치도 이루어 내고 수준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예방과 보상수준을 넘어 더 나은 일자리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기회로 역전시키는 전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NCCK도 이 참에 상시 활동기구인 기후재난 대책위원회를 검토해야 하고 구성 교단, 지역NCC, 교회의 동참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3)또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현재도 직격탄을 맞고있는 위험노동(햇빛노출농업, 햇빛노출건설노동, 뜨거운 실내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햇빛노출노동의 시간을 아침과 저녁으로 조정, 실내온도를 버틸 수 있는 온도 이내로)도 신속히 이루어가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처지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연대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4)중앙정부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정책중 소멸위기 농어촌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사업을 잘 실행하고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지역은 우선 선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거대 풍력및 태양광 사업등도 민과 노동자.종교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도 공적자금이나 기업자금만이 아니라 보장을 통해 민의 자금도 동원해 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교회의 책임 누구의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현아 목사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총무

정의로운 전환과 교회의 책임 누구의 짐을,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

이현아 목사
NCCK기후정의위원회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총무

1. 전환의 짐은 누구에게 지워지는가

현재 산업 분야에서 전환은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위로부터 추진하는 하향식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환의 짐은 산업 전반에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으며, 계급, 고용형태, 지역, 연령, 성별 등이 중첩되며 사회, 경제, 정치적 약자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발제는 전환의 짐을 지는 이들을 거버넌스상의 위치, 즉 전환의 의사결정 구조에 접근,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축으로 세 층위로 유형화하고, 각 층위의 상이한 결핍에 대응하는 교회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공공, 국가 주도 산업 내부의 최하위 집단

- 석탄화력, 조선, 철강 등 지역 경제마저 단일 산업에 종속될 정도의 거대한 산업 부문의 노동자들이다. 이 부문의 특징은 상당수가 공공부문이거나 국가가 깊이 관여하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 국가 주도 전환이므로 대(對)정부 협의 통로가 존재하나, 그 편익이 고용 위계의 아래쪽으로 균등하게 이전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원청 정규직은 전환 배치되는 반면, 하위 하청, 비정규직은 사실상 배제된다.
- 산업과 지역이 일체화되어 있어, 사업장 폐쇄가 고용 상실을 넘어 지역의 세수, 상권, 인구의 동반 붕괴로 확산된다. (예: 태백과 정선 폐광 이후 하청 광부의 불안정 노동 재편입)

2) 대기업, 공공 영역 외부의 비가시적 집단

- 민간이 지배하는 중소기업부문으로, 전환과 관련된 협의 통로 자체가 부재하다.
- 규모는 공공, 국가주도 산업을 상회하나 사회적 가시성은 현저히 낮다. 전환이 정책이 아닌 시장이나 기업의 결정으로 진행되어 협상의 대상조차 불분명하다.
- 하청 위계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자기 직무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정보에서도 배제되는 이중의 배제 구조에 놓인다.

3) 산업 노동의 틀 외부의 1차 산업 종사자

- 농민, 어민은 탈탄소 정책 이전에 기후재난 그 자체의 일차적 피해자이다. (농어업인 다수가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 즉 기온 상승에 따른 수확량, 어획량 급감 등의 피해)
- 적응 역량이 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소농, 고령농, 영세 어민에게 피해가 선차적으로 집중된다.
- 동시에 농축산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즉 피해자인 동시에 전환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다.

결국 전환의 짐은 ① 공공 내부의 최하위, ② 공공 외부의 비가시적 집단, ③ 산업 틀 외부의 피해자-전환대상 집단 등에 집중적으로 전가되며, 각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가시성의 부재, 물질적 기반 상실등의 상이한 결핍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2. 교회의 고백적 토대 - 전환을 이끄는 회심

- 착취적 경제와 재생적 경제의 대비에서 보듯, 착취의 경제는 땅을 캐내고 태우고 버리며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이며, 그 세계관의 뿌리에는 소비주의와 군사주의가 있다. 이는 피조물을 '자원'으로, 노동자를 '비용'으로 환원하는 두 논리가 함께 작동함을 뜻한다. 따라서 생태문제와 노동문제는 별개의 두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결과이다.
- 그 뿌리는 '끝없는 성장'이라는 문명적 신화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이 무한성장의 신화를 문제 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 산업 전환을 이루더라도 무한성장의 논리가 존치된다면, 이는 수탈의 대상을 바꿀 뿐 수탈의 문법 자체를 바꾸지 못한 것이다.
- 정의로운 전환은 교회 외부에서 요구되는 의제가 아니다. “NCCCK 100주년 사회선언문”(2024)은 “생명에 기초한 정의로운 전환”을 인류 생존과 평화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였고, “기후정의 10년 행동”(2025) 선언은 경제·정치 구조의 변혁을 위한 구체적 행동 착수를 천명하였다. 교회의 과제는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고백과 선언의 이행에 있다.

3. 교회의 역할과 과제

이제, 충남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틀(김현우 소장 발제물)을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세 층위와 그 결핍(가시성의 부재·의사결정 배제·물질적 기반 상실)에 대응하는 교회의 과제를 각 영역에서 단기적 개입과 구조적 개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노동자 지원 — 취약 노동 집단에 대한 개입

- 지역의 특성에 따른 폐쇄 예정 사업장, 소멸위기 직군, 노동의 물질적 기반의 상실 등 예견되거나 이미 발생한 문제와 피해의 사회적 가시화
- 교회의 공적 발언권을 활용하여 위 문제들을 공론장으로 매개 (하위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 양질의 일자리 전환,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 요구)
- 협의 통로 자체가 부재한 민간 중소기업, 부품 산업 노동자의 존재를 의제화하고, 자기 직무의 소멸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하위 하청에게 전환 정보와 교육을 연결
- 산업 노동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책에서 누락되는 농민, 어민을 노동 담론 안에 포함하고, 저탄소 전환 요구가 소농·영세 어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변
- 실직 및 이직 대상 노동자를 위한 긴급 지원 : 상담, 법률, 재교육 연계, 실직 및 실업 노동자 긴급구제를 위한 협동조합 조직 또는 참여

2) 지역사회 지원 — 지역 단위의 개입

- 지역 교회나 노회 주관의 상설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 배제된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 특히 민간 주도 전환이라 협의 구조가 부재한 부품 산업 밀집 지역에, 교회가 최초의 대화의 자리를 여는 촉진자로 참여
- 산업선교회 등 노동상담 전통을 계승한 지역 교회 기반 전환 정보, 상담, 지원 허브 구축
- 인구소멸, 고령화 최전선의 농어촌 교회를 먹거리 정의의 실천 거점으로 재규정하고, 도시-농어촌 교회 결연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로컬푸드, 직거래) 지원
- 당사자, 청년세대, 연구자가 결합한 지역의 장기 전환 비전 수립(지역 전환 연구소나 재단 모델 참조 가능)

3) 복원 및 재생 — 자원, 자산 차원의 개입

- 교회 및 교단 재정의 화석연료 투자 회수 및 정의로운 전환 기금, 협동조합으로의 재투자 준비
- 교회 부동산(지붕, 유허 부지)의 재생에너지 자원화 및 수익을 지역의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순환
- 폐쇄 사업장 부지의 공공자산화 및 지역 자산으로의 생태적 재생을 요구하는 시민 연대 참여
- 기후재난으로 훼손된 1차 산업의 생태 기반(어장, 농지, 연안, 갯벌)의 복원을 창조세계 보전 과제로 통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